

법조

'이영훈 명예훼손'...檢, 조국 피고발사건 수사 착수

홍다영 기자

입력 2019.08.09 17:57 | 수정 2019.08.09 18:00



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(이하 고시생 모임)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.

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부장 성상헌)는 고시생 모임이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전 날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.

조 후보자는 저서 '반일 종족주의'를 출간한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를 '친일파'라 비판했다.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'반일 종족주의'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"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, 시민들은 이들을 '친일파'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"며 "이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,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'부역·매국·친일파'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"고 썼다.

이에 고시생 모임은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. 이들은 "이 전 명예교수의 저서에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"고 주장했다.

이들은 "본인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"며 "검찰을 지휘·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 여부로 수사를 지휘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"고 했다.

한편 조 후보자는 9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.